제410회국회(정기회)

업 무 현 황

2023. 10. 19.

법제처

목 차

Ⅰ. 일반 현황 ····· 1

1. 조직 ····· 3

2. 정원 및 현원 ····· 4

Ⅱ. 예산 집행현황 ····· 5

Ⅲ.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9

1. 정부입법 총괄 · 조정 ····· 11

2. 법령심사 ····· 12

3. 법령해석 ····· 13

4. 법령정비 ····· 14

5. 행정법제 혁신 ····· 17

6. 법제지원 ····· 18

7. 법령정보의 제공 및 법령 홍보 ····· 20

8. 법제교육 ····· 22

9. 법제교류 ····· 23

Ⅰ. 일반 현황

1. 조직

2. 정원 및 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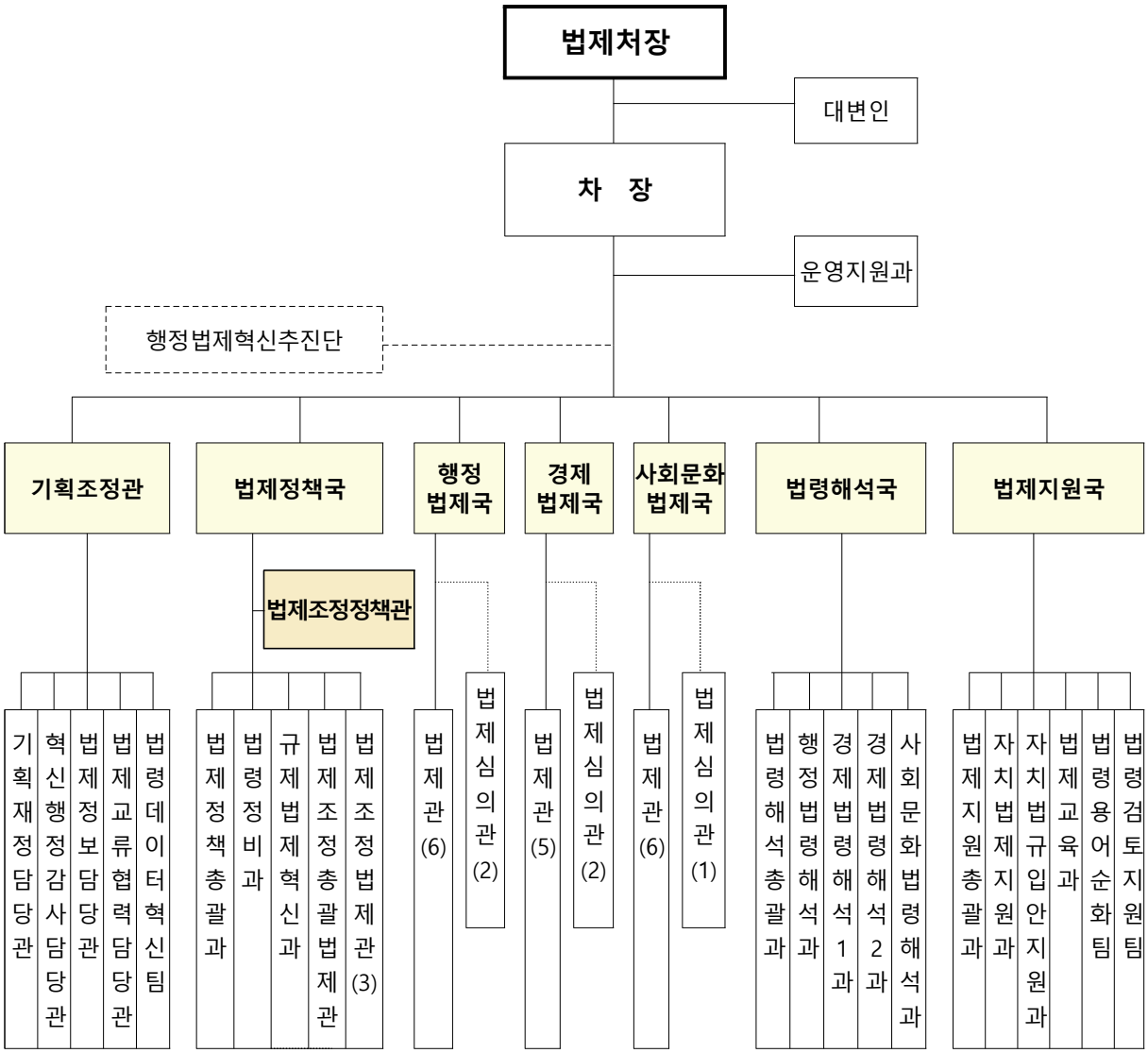
1. 조직

○ 처장 : 정무직 공무원

○ 차장 : 일반직 고위공무원

○ 1조정관 6국 1정책관

('23. 9. 30. 기준)



2. 정원 및 현원

('23. 9. 30. 기준, 단위: 명)

직 급 \ 인 원	정 원	현 원	과 부 족
계	242	230	△12
처 장	1	1	-
차 장	1	1	-
고위공무원	13	13	-
3급 또는 4급	11	11	-
4 급	28	32	4
4급 또는 5급	26	28	2
행정 · 전산 5급	102	91	△11
행정 · 전산 6급	31	29	△2
행정 · 전산 7급	10	10	-
행정 · 전산 8급	7	7	-
행정 · 전산 9급	2	1	△1
전문경력관	1	1	-
기록연구관	1	1	-
학예연구사	1	1	-
운전 · 사무운영	7	3	△4

Ⅱ. 예산 집행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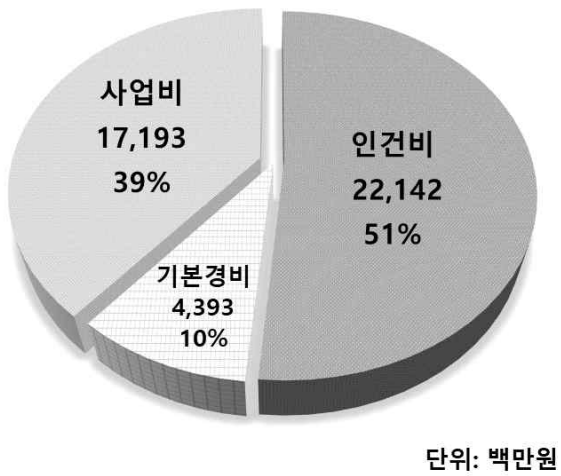
예산 집행현황

○ 세입·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		전년 대비	
	예산(A)	추경	결산	예산(B)	집행액 (9. 30. 기준)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43,194	42,952	40,670	43,728	33,442	534	1.2
인 건 비	22,142	22,109	20,771	22,142	16,125	-	-
기 본 경 비	4,186	4,100	3,669	4,393	3,214	207	4.9
사 업 비	16,866	16,743	16,230	17,193	14,103	327	1.9

▣ '23년도 기능별 예산 구조



▣ '23년도 사업별 예산 현황

- 법제업무정보화추진 : 8,871백만원
- 법령정보제공 : 1,950백만원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1,470백만원
- 법제정비 : 1,307백만원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서비스 : 1,051백만원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 1,116백만원
- 행정법제 혁신 : 730백만원
- 법령심사지원 : 381백만원
- 외국법제기관교류 : 243백만원
- 법제정책연구개발 : 74백만원

Ⅲ.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 정부입법 총괄·조정

2. 법령심사

3. 법령해석

4. 법령정비

5. 행정법제 혁신

6. 법제지원

7. 법령정보의 제공 및 법령 홍보

8. 법제교육

9. 법제교류

1 정부입법 총괄 · 조정

□ 주요 내용

○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 시행, 하위법령 제때 마련 관리,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이견 조정 등 **정부입법 총괄 · 조정**

□ 추진 실적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과제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1. 25.) 및 관리

- 총 276건의 정부입법계획 중 국회제출 132건(47.8%), 입법절차 진행 중 89건, 입안 중 55건(9. 30. 기준)
- 정부입법계획의 **이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 입법예고 필요 시기 등 입법단계별 알림서비스,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 월별 점검 등

○ **국회 통과 법률의 제때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때 마련**

- '23년 총 199건 모두 제때 마련(하위법령 제때 마련율 100%, 9. 30. 기준)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및 **부처 이견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신속히 조율**하여 **국회에 전달**

- '23년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230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부처 이견 조정 71건(본협의회 4건 및 실무협의회 67건, 9. 30. 기준)

□ 향후 계획

○ **입법추진 단계별**(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추진현황 점검 · 관리**를 통해 정부입법의 체계적 · 효율적 추진 및 차질 없는 정책 수행 지원

-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부처별 법제업무 수행에 대한 법제업무평가 실시('24.1월)

○ 정부 **주요 정책과제**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종합**, 소관 상임위에 전달함으로써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적극 지원**

2 법령심사

□ 주요 내용

○ **(국법 체계에 부합하는 법령심사)** 정부입법 과정에서 위헌·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고, 헌법, 법률·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에 이르는 **국가법령 체계의 통일성 유지**

○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법령안의 심사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심사제 운영

□ 추진 실적

○ **(법령심사)** 법률 132건, 대통령령 602건 등 총 1,390건 심사(9. 30. 기준)

- 주요 정책과제 및 정책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전입안 지원 및 신속한 법제심사 실시**

< 최근 5년간 연도별 법령심사 현황 >

구분 / 연도	계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훈령
2019	1,962건	209건	50건	876건	792건	35건
2020	2,315건	319건	31건	1,034건	886건	45건
2021	2,033건	149건	26건	922건	898건	38건
2022	1,878건	144건	28건	887건	783건	36건
2023(9. 30. 기준)	1,390건	132건	20건	602건	605건	31건

○ **(국민참여심사)**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주민등록법」* 등 **총 81건**(9. 30. 기준)의 법령안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심사 실시**

* (사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볼 수 없도록 열람·교부를 제한한 것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권 해제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23.5월)

□ 향후 계획

○ 법령안의 **법리적 쟁점 검토·대안 제시**, 부처협의·입법예고 단계부터 **사전심사** 등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령심사로 **정부입법**을 **종합 지원**

○ 입법예고 의견제출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심사제 적극 실시**

3 법령해석

□ 주요 내용

○ 행정부 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정부 견해의 통일성 유지,** 법령 의미의 명확한 제시를 통한 **법 집행의 공정성 · 신속성 제고**

○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규제의 확대적용**이나 **법령의 소극적 · 차별적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 추진 실적

○ '23년 **총 33회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53건**의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회신**(9. 30. 기준)

-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고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해석** 실시

'23년 주요 적극해석 사례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도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석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계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신뢰성 · 공정성 제고**

- '23년 관계인 참여 안건 48건 중 민원인 참여 안건 37건(9. 30. 기준)

○ 법령해석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7회 운영(9. 30. 기준)

* 기술적 • 전문적 사항이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안건 대상

□ 향후 계획

○ 법령해석 과정에서 **관계 국민의 의견진술 등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권리** 강화

○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령해석 관행을 바로잡고 감사 등을 의식한 소극적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령해석 지속 실시**

○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법령해석 추진** 및 **업무처리 단계별 진행상황 안내** 등 **민원인 편의 제고**

4 법령정비

가 불합리한 법령 정비 및 규제법제 혁신

□ 주요 내용

○ 소상공인의 재도약, 청년세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정비** 및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명확한 법령 정비** 추진

○ 신기술 규제특례 법제화 등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제 개선 추진

○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

□ 추진 실적

○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법령정비

-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정비

  * 109개 법령 138개 과제 정비 완료(1. 5. 및 4. 25. 공포)

- 소상공인 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최대 180일까지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15개 법률 국회 제출 완료(9. 8.), 4개 대통령령 정비 완료(9. 12. 공포)

○ **청년세대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법령정비

-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해 미성년자 등의 응시를 제한하는 **자격시험 법률**을 **성년이 되기 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인노무사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5. 18.)

-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개별법상 교육지원·수수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정비 완료(9. 26. 공포)

○ **신기술·신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법령정비

-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위해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법률 국회 제출(7. 12.)

- **신기술·신산업 성장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확대·적용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9개 시행령 정비 완료(3. 28. 공포)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 법령상 **조례위임 확대**, 중앙부처 **사전승인·협의 및 보고 최소화** 과제 선정(~6월) 및 법률과 하위법령 정비 추진(~11월)

  * (83개 법률): 입법예고(7월~8월), 국회 제출(11월)
  (41개 대통령령, 24개 총리령·부령): 입법예고(7월~8월), 공포 및 시행(11월)

□ 향후 계획

○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개선 지속 추진

-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법령상 학력 기준을 대학에서 전문대학·특성화고교 졸업까지 확대하고, 연령 기준을 미성년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

  * 8개 법률(연령기준 개선) 및 31개 법령(학력기준 개선) 연내 정비 추진

○ **국민·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불합리한 행정조사*** **등** 신규 과제 발굴 및 정비 추진

  * 유사·중복 행정조사 폐지·통합, 행정조사 실시 주기 완화 등

○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는 법체계 개선 지속 추진

- **지방사무에 관한 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 개선과제** 발굴·정비

나 행정규칙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주요 내용

○ **(행정규칙 정비) 규제 행정규칙 사전검토, 위법·부당한 행정규칙의 정비**를 통한 법적 타당성 제고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도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문장을 알기 쉽게 사후 정비

□ 추진 실적

○ **(행정규칙 정비) 규제 행정규칙 149건** 사전검토 및 **법적 문제 12건** 통보, 사후심사를 통해 **정비과제 175건** 발굴(9. 30. 기준)

- **비공개 행정규칙 260건의 전문 요청**,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는 **37건 공개 전환**(9. 30. 기준)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3년 부처협의안 검토를 통해 **어려운 법령 용어 353개의 정비안** 마련, **294개를 법령 심사 시 반영**(9. 30. 기준)

* (예시) '폴대' → '막대', '교보재' → '보조 재료', '유가지' → '유료 간행물'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의 어려운 용어 정비안 제공 등 **국회 상임위와의 협업**을 통한 법령용어 정비 추진

* 문체위(3. 13.) 및 법사위(4. 10.) 방문 설명 등으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 통과 지원(8. 8. 공포)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검토를 통해 **어려운 용어 6,452개**가 포함된 **행정규칙 4,005개**의 정비안 마련('20.~'23.), **46개 소관 기관에 송부**('23. 5. 31.)

* (예시) 'CPR' → '심폐소생술(CPR)', '소제' → '청소', '옵서버' → '참관인'

- 「민법」, 「형법」 등 **기본법 속 어려운 한자 표기 및 일본식 표현** 등을 한글화한 정비안 마련, 법무부 송부('23.2월)

□ 향후 계획

○ **(행정규칙 정비)** 규제 행정규칙 **사전검토**, 행정규칙 **사후심사**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비공개 행정규칙** 공개전환 적극 추진

* 비공개 행정규칙 목록은 2개월, 전문은 반기별로 요청하여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어려운 법령 용어가 포함된 **법률 정비안의 국회 처리 지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의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독려**

5 행정법제 혁신

□ 주요 내용

○ 만 나이 사용 정착, 국민 권리보호 강화 및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추진

□ 추진 실적

○ 법적·사회적 기준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시행**(6. 28.)

- **'만 나이'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및 행안부·교육부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학생, 지역주민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실시

  * ① 전국 11,133개 학교의 학생·학부모 대상 '만 나이' 사용 교육·홍보 실시 ② 「청소년 보호법」 등 만 나이 예외규정 소관 부처(여성가족부 등 17개 기관)와 협업하여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혼선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 실시

- **'만 나이' 예외규정 1차 정비**(6개 법률 및 2개 시행령) **추진**(6. 12.), 2차 정비안 마련 위해 국민의견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8월)

○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이의신청, 인허가의제, 과징금, 제척기간** 관련 **개별법**에 대한 **법체계 정비 추진**

  * 28건의 법률안 중 7건의 법률안 국회 통과(9. 30. 기준)

○ 취소 또는 철회 시 손실보상 등 국민 권익구제 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23.12월 국회 제출 예정)

○ 장애인 보호 및 국민 안전과 관련된 **3건***의 **입법영향분석**(~10월)

  * ① 장애인 등록제도(장애인복지법), ② 어린이 안전제도(어린이안전법 등), ③ 위생용품 관리제도(위생용품 관리법)

□ 향후 계획

○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만 나이' 예외규정 2차 정비안 마련**

  *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에서의 사업자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마련

○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이행강제금, 수수료, 직접강제 등 5개 제도**를 규정한 개별 법률의 **정비안 마련**, 국회 제출 및 하위법령 정비 추진

○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소관부처 개선 권고

6 법제지원

가 법령안 입안 지원 및 행정법령 검토 지원

□ 주요 내용

○ 국가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의 조문화 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관련 **행정법령에 관한 상담 및 자문**의견 등 제공

□ 추진 실적

○ **(입안지원) 217건**의 **법령안**에 대한 입안지원 완료(9. 30. 기준)

< 최근 3년간 연도별 법령입안지원 현황 >

구분 / 연도	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2021	309건	91건	125건	49건	44건
2022	342건	101건	144건	62건	35건
2023(9. 30. 기준)	217건	52건	84건	43건	38건

○ **(원스톱 법제지원) 정부**의 **주요 정책**이 완성도 있게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입안부터 심사까지 원스톱 법제지원** 실시

'23년 원스톱 법제지원 주요 사례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국내 정착을 위한 정착비 지급, 주택 우선공급 등 지원 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조문화 지원(국가보훈부)
- 법률의 위임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추정되는 질병의 종류"를 뇌혈관 질병 등으로 구체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입안 신속 지원(인사혁신처)

○ **(법령검토 지원) 91개 기관**(중앙행정기관 29개, 지방자치단체 62개) 대상으로 **총 372건의 상담 등**을 **평균 2일** 이내에 제공(9. 30. 기준)

* 법 집행 현장에서의 적극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 '22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담 및 자문의견 제공

□ 향후 계획

○ 법령안의 **법리적 쟁점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공**하여 정부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문의견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적시 수행 지원**

나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 역량강화 지원

□ 주요 내용

○ (자치법제지원) 자치법규 관련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한 **의견 제시, 지방자치단체 입법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자치법규의 적법성 · 품질 제고**

○ (자치법규 입안 지원) 제정 · 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제공, 위임자치법규 제때 마련 지원**을 통한 자치법규의 **완성도 제고**

□ 추진 실적

○ (자치법제지원) **자치법규** 관련 **법리적 쟁점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204건**,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29회** 실시(9. 30.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법제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 회의**」 **개최**(5월, 10월)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질의하는 사항 중 대표적인 사례를 엄선하여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 사례 50선**」 **발간 · 배포**(9. 14.)

'23년 자치법규 의견제시 주요 사례

•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전라남도).

○ (자치법규 입안 지원) **지원대상을** 조례안뿐만 아니라 **규칙안까지 확대**하고 **109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611건***의 **입안지원** 실시(9. 30. 기준)

* 입법컨설팅 385건, 입법모델 제공 183건, 위임조례 예비검토 27건, 참고자치법규안 검토 16건

- 법령 제정 · 개정 시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제정 · 개정이 필요한 위임자치법규 사항 238건** 통보, 제때 마련 지원(9. 30. 기준)

□ 향후 계획

○ **자치법규와 관련된 해석상 혼란 방지**를 위해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입법컨설팅 등을 통한 **자치입법 역량 강화** 지원

○ **정부 주요정책 관련 자치법규** 입안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 향상**

7 법령정보의 제공 및 법령 홍보

가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주요 내용

○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 **통합 · 제공**

○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 ·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추진 실적

○ 국민들이 일상 용어나 질문을 통해 관련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 일상용어와 법령(약 5천여건)간의 관계 등을 연결하는 법령정보지식베이스 구축 중('22.~'23.)

○ **10개 위원회**(공정위, 금융위 등) **결정문** 약 1만 1천여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 · 제공**하고, **공공데이터로 개방**(9. 30. 기준 약 8천8백건 개방)

○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선정, 그림 · 표 · 사진 등 **시각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건축법」, 「도로교통법」 등 12개 법령 대상 총 431개 컨텐츠 제공 중

- '23년 **부동산 · 국토 · 조세 · 노동 분야*** **콘텐츠** 신규 개발 및 제공

*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근로기준법」 등 32개 법령 대상 콘텐츠 336건 개발(9. 30. 기준), '23.10월부터 순차적 제공 예정

□ 향후 계획

○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법령정보지식베이스 구축('22~'23), 지능형 검색시스템 개발('23~'24), 검색 고도화('25~'26)

○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추진('24)

* 법령정보를 AI가 학습하여 법령의 세부정보, 관련 판례 • 해석례 등을 정리 • 요약하여 제공

○ '23년부터 **매년 30개 법령** 이상 콘텐츠 개발, **'26년까지 100개 이상 법령**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나 국민과 소통하는 법령 홍보 강화

□ 주요 내용

○ 유익한 **법령정보** 및 **법제처 주요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콘텐츠로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

○ 어린 시절부터 법치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어린이 · 청소년법제관 운영**

□ 추진 실적

○ 만 나이 통일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청년 관련 법령정비 등 **법제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게재**

* 영상 249건, 카드뉴스 123건, 기사형 콘텐츠 72건, 웹툰 29건 제작(9. 30. 기준)

○ **친근하고 재미있게** 법령과 법제정책에 다가갈 수 있도록 **법제처 캐릭터** 및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민관협업 방식의 홍보 병행**

* 새령이 영상 55건,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5건 제작(9. 30. 기준)

○ **어린이 · 청소년법제관 선정**, 어린이 ·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토론마당 및 기본법제교육 등 **입법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법제관 대상을 고등학교 및 '학교 밖 지원센터'까지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법제교육 지원 확대**

* (어린이) 지역아동센터 13개소 포함 총 1,465명 선발, 토론마당(5월) • 모의의회(8월) • 지역아동센터 대상 법제처 탐방(7월) • 기본법제교육(8월)

** (청소년) 2개 학교 밖 지원센터 포함 총 412명 선발, 기본법제교육(6월) 및 토론마당(8월)

□ 향후 계획

○ **주요법령과 법제정책을 쉽고 충실하게 홍보**하되, 국민들의 매체 사용 변화 추세에 맞추어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

○ SNS 이벤트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 참여** 확대

○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제교육 확대 등 **소외계층에 대한 법제교육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 대상 어린이법제관 기본법제교육(10월~11월) 및 어울림 한마당 개최(12월)

8 법제교육

□ 주요 내용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법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적 · 체계적 법제교육** 실시

○ 법제교육원 개원('24.7월 예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정 준비

□ 추진 실적

○ **법제교육원 개원** 대비, 수요자 맞춤형으로 **교육과정 개편**

- 사례 중심 **토론 · 참여형 장기 교육과정**(5일) 시범 실시(5월 · 9월) 및 **맞춤형 장기 교육과정**(3일 이상)* 확대 추진 등 법제교육** 강화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11개 기관에서 3일 장기 교육과정 393명 교육(9. 30. 기준)

** '23년 총 44,630명(집합교육 21,430명, 사이버교육 23,200명) 교육(9. 30. 기준)

- 자치법규 사례, 공공기관 관련 판례 · 해석 등 실무 중심 과정 신설

○ **법제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법제교육 신청 · 관리, 수료증 발급 등 법제교육 전반을 자동화하는 **법제교육운영시스템 구축** 중(~11월)

○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법제 교육** 지원

- 자치법규 합법성 제고 관련 신규과정 개발, **시도 순회교육**(80회, 5,899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특별교육과정**(5회),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1회) 실시

○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생활 속 알기 쉬운 법령' 교육 지원

* '23년 상반기 총 15개 기관 263명 대상 자녀양육, 가족관계 등 사례 중심 교육

□ 향후 계획

○ **법제교육원 개원** 대비 및 **법제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 준비**

- 행정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교육생 숙박시설 · 교육장 확보** 및 법제교육운영시스템 시범 운영

○ **지방의회 특화과정**, 중앙 · 지방 · 공공 교육기관과 연계한 **장기 교육과정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속 노력

9 법제교류

□ 주요 내용

○ **상호 방문, 국제회의** 등을 통해 외국 법제기관과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

○ 우리 국민 · 기업의 **대외 경제활동 · 교류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 통일 과정에서의 **법제통합에 대비**한 **남북법제 통합방안 연구**

□ 추진 실적

○ **(외국기관 교류)** 외국 법제기관별 수요를 고려한 **법제교류협력 추진*** 및 ODA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 베트남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

* 몽골 법제연구원장 방한(1월), 캄보디아 공공개혁관리 운영위원회 법제처 방문(4월)

** 법제역량 강화 한-인니 글로벌연수(7월), 베트남 ODA 현지조사 대상 사업 선정(8월), 인니 법무인권부 협의의사록(RD) 체결(9월) 등

○ **(해외법령 제공) 해외 진출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외 법령의 한글 번역본** 총 136건 제공

- **K-콘텐츠 수출 및 해외진출 집중 지원**을 위해 미국 등 주요 9개국의 콘텐츠 관련 해외 법령정보를 수집 · 번역하여 제공(문체부와 협업)

○ **(남북법제) 북한의 환경 법제 연구** 및 행정 분야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 분석**(3월~10월) 등을 통해 **남북법제 통합의 토대 구축**

*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9월)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회의(3월, 7월)

□ 향후 계획

○ 인도네시아 ·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수 법제 공유**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ODA 사업 추진**** 등 외국법제기관과의 교류협력 지속

*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10. 27.)

**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조사(10월)

○ K-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른 해외 콘텐츠 시장 관련 법령정보 제공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

○ 법제통합에 대한 **연구 자료 축적** 및 **남북법제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 완성도 제고**

* 법제처 · 통일부 · 법무부 남북법제 공동세미나 개최('23.12월)